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1992. 3. 21

申 相 振(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目 次

1. 序 論	3
2. 中國 改革派의 主張과 保守派의 對應	5
가. 改革派의 改革·開放 擴大 主張	5
나. 保守派의 對應	13
3. 改革派의 浮上과 改革政策 展望	16
가. 人事改編 方向	16
나. 改革政策 展望	19
4. 北韓에 미치는 影響	24
가. 中·北韓關係 變化 可能性	24
나. 北韓의 開放 誘導	26
5. 우리의 考慮事項	27

빈 면

1. 序 論

- 中國의 최고 실권자 鄧小平은 1992년 1월 중순부터 深圳과 珠海 등 廣東省 일대의 경제특구를 방문, 1978년 11次 3中全會 이래 中國이 추진해 온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심화·확대할 것을 주장하였음.
- 그후 黨總書記 江澤民 등 개혁과 지도자들은 「黨政治局 擴大會議」¹⁾를 개최(1992. 2. 12)하여 鄧小平이 주창한 개혁·개방의 철저한 시행을 결의하였으며, 鄧小平路線 학습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을 역설하였음.
- 이에 따라 「人民日報」와 「文匯報」 등 中國의 주요 언론매체들도 경제특구를 증설하고 기업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자본주의의 유용한 부분을 도입함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中國의 社會主義體制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바람직한 정책노선이라고 보도하여 왔음.
- 그러나 이에 대해 陳雲과 鄧力群 등을 정점으로 하는 보수파 지도자들은 무분별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蘇聯

1) 이는 毛澤東이 黨의 지도자로 부상한 1935년 遵義會議, 文化大革命의 추진을 결정한 1966년 회의 그리고 胡耀邦의 퇴진을 결정한 1987년 회의 등에 비유될 정도의 중대한 의미를 갖는 회의로 평가되고 있음. *FBIS-CHI-92-034*, February 20, 1992, p. 20.

및 東歐 社會主義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개혁·개방 확대보다는 서방의 中國에 대한 「和平演變」 책략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음.

- 中國내에서 개혁과 개방의 심화·확대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온 개혁파와 보수파간의 정책대결에서 현재 개혁파가 승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따라 中國에서는 앞으로 보수원로의 퇴진과 개혁파의 부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개혁과 개방이 심화·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7期 全人大 5次 會議」(3월 20일 개막)에서 발표된 「政府工作報告」를 통하여 中國은 鄧小平이 주장한 개혁노선의 확대추진을 공식 천명하였음.
- 北韓도 현재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어서 정치개혁을 유보한 채 경제개혁을 추진해 온 中國式 改革·開放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中國이 개혁정책을 더욱 확대할 것인지의 여부는 北韓의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中國의 내부정세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에 따른 개혁전망을 예측해 보고자 함. 아울러 中國의 변화가 北韓의 개방과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함.

2. 中國 改革派의 主張과 保守派의 對應

가. 改革派의 改革·開放 擴大 主張

(1) 背景

가) 內部安定 基盤 構築

- 1988년 黨 第13次 3中全會에서 급속한 경제건설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治理經濟環境, 整頓經濟秩序」라는 경제조정정책을 실시(1991년 9월 中央工作會議에서 공식 종료를 발표하였음)한 결과, 1991년 중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음.²⁾
 - 「治理整頓」政策 실시 기간 동안 5.4%의 연평균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1991년 국민총생산액(약 3천 900억달러)이 전년 대비 7.5% 증가함으로써 중국경제는 인민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계(「溫飽段階」)에 도달하였음.
 - 경제개혁정책 추진 이후 심각할 정도로 치솟던 물가도 1991년에는 3.5%로 진정되었고, 실업률도 2.5%선을 넘지 않고 있음.

2) 國家統計局, “治理整頓深化改革成果顯著,” 「人民日報」, 1992. 2. 29.

- 1990년부터 엄격한 輸入規制政策으로 무역흑자를 기록 (87억달러)하기 시작하였고, 1991년에도 약 100억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음.
- 외환준비액도 1991년 6월말 기준 33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음.
- 경제면에서의 안정기조를 바탕으로 천안문사건 이후 만연되었던 中國의 사회적 불안정 국면도 경제회복과 더불어 강력한 내부 통제정책으로 점차 진정되고 있음.

나) 對外關係 回復

- 中國은 1990년대에 들어 「평화공존 5개원칙」을 기본 외교정책 노선으로 채택하여 對外政策에서 이데올로기보다도 경제적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서방과의 실질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음.
- 이에 따라 中國은 美國과 日本 그리고 서구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베트남, 이스라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과거 적대적이었던 국가들과도 국교를 정상화하였음.
- 李鵬, 楊尙昆, 錢其琛 등 中國의 지도자들은 최근 서유럽, 동남아 및 중동지역을 방문하여 이들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있음.

- 中國과의 실질관계 증대를 바탕으로 1989년 6월 天安門 事件 이후 美國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中國에 대해 취해왔던 경제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中國의 2단계 경제개혁 추진을 위한 자극제가 되고 있음.
- 최근 중국경제가 안정을 회복하여 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여, 中國의 개혁파 지도자들은 中國의 보수 회귀 가능성에 대한 서방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全人大」(1992년 3월 20일 개막)와 「黨大會」(1992년 10월말 예정)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中國의 지도적 정책지침으로 확정함으로써 서방제국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증대시켜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였음.
- 개혁·개방을 둘러싸고 中國내 보수파와 개혁파간에 전개되어 왔던 첨예한 政策對立은 서방제국의 中國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어 왔던 바 있음.

다) 改革政策에 대한 保守派의 攻擊

- 지난 연말부터 鄧力群을 위시한 보수파들은 개혁·개방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논거로 하여 더 이상의 경제개혁 심화를 반대하여 왔고, 금년 1월 초에는 보수원로들이

주도하고 있는 「黨 中央顧問委員會」가 자본주의적 경제 특구의 폐지를 黨 中央에 요청하였던 바 있음.

－ 보수파들은 沿海地區의 경제특구가 자본주의를 실천하고 있으며, 「和平演變」의 온상이 되어 왔다고 비판하여 왔음.

○ 그동안 14次 黨大會 이후 자신의 개혁·개방노선이 무산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여 왔던 鄧小平은 이와 같은 보수파의 개혁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특구를 방문하여 改革·開放政策의 擴大를 촉구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음.

○ 鄧小平은 또한 지난 10여년 동안의 개혁정책 실시 결과 중국인민들 사이에서 개혁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 개혁메시지를 강조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여 개혁의 대세를 지속시키고자 하였음.

－ 毛澤東이 「文化大革命」기간중 대중을 동원하여 劉少奇 일파를 제거하였던 바와 같이, 鄧小平은 개혁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여 차체에 보수성향을 띠고 있는 「中央顧問委員會」를 해산시키는 등 보수파를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자신의 사후에도 경제 개혁·개방정책이 黨의 지도노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발전의 적극 추진을 역설하였음.

(2) 改革派의 改革·開放 擴大 主張 要旨

- 鄧小平, 江澤民, 楊尙昆 등 개혁파 지도자들은 개혁과 개방의 심화·확대에 의한 민생의 안정만이 中國 社會主義體制를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주장하고 있음.

가) 經濟建設 重視

- 中國의 개혁파 지도자들은 中國이 당면하고 있는 중심 임무는 思想建設이 아니라 經濟發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 中國은 1978년 11次 3中全會부터 이미 「一個中心, 二個基本點」을 기본 정책노선으로 설정하여 경제건설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두어왔음.
 - 一個中心은 경제건설이며, 二個基本點은 四個堅持(黨의 지배, 무산계급독재, 사회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 동사상)와 개혁·개방 추진임.
 - 11次 3中全會 이래 中國이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에는 四個堅持를 강조하여 억압적인 통제에 의해 안정을 되찾았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을 보여 왔음.

- 경제건설을 黨의 중심 임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데 대한 개혁과 지도자들의 주요 논조는 다음과 같음.
 - 中國共産黨이 당면하고 있는 중점 임무는 경제발전인 바, 이데올로기도 중요하나 이를 강조한 나머지 경제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됨(鄧小平).
 - 개혁·개방은 中國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임.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中國은 멸망의 길로 다다르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임(鄧小平).
 - 당 내부와 경제가 건실하면 서방의 「和平演變」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임. 당은 회의, 문건의 과다 등 관료주의, 형식주의의 병폐를 시정하고 내부 부패를 척결해야 함(鄧小平).
 - 中國의 3대 임무는 經濟發展, 黨建設 그리고 社會安定維持이며, 이중 핵심은 경제발전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정중 中國은 경제건설을 줄곧 중심 임무로 규정하여 왔음. 당과 국가의 각종 업무는 반드시 경제건설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江澤民).
 - 경제건설이 당과 국가의 중심 업무임.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中國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혁과 개방에 의해 경제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기 때문임.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에 유리한 정책조치를 모두 지지함(楊尙昆).

- 개혁파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蘇聯과 동구 사회주의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경제개혁의 실패에 있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中國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나) 資本主義의 長點 導入

- 中國의 개혁파들은 또한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와 관련된 모든 사상이나 방법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장점을 수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체제라고 주장하고 있음.
 - 上海와 深圳에서의 주식제 시험이 성공하고 있듯이 자본주의도 장점이 있으므로 그 일부는 사회주의체제에도 적용이 가능함(鄧小平).
 - 국영기업의 경영체제를 전환하여 국영기업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하여 종신고용제를 폐지하고 근로계약제를 체결하는 등 국영기업에 자본주의적 市場競爭原理를 도입해야 함(朱鎔基).
 - 선진 자본주의의 기술, 기업관리 경험, 경제이론을 中國의 상황에 올바르게 도입·적용하는 것은 中國의 현대화건설에 도움이 될 것임(方生).
- 이는 中國이 趙紫陽의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을 공식적

으로 부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앞으로 中國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적극 도입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중국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經濟改革의 점진적인 확대 주장은 소유권의 다양화와 시장기능의 강화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는 정책의지로 간주되고 있음.

다) 改革反對者의 退陣 要求

- 鄧小平은 경제특구의 폐지 등 개혁·개방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보수원로들이 정치일선에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³⁾
 - 改革과 開放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中國은 많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들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방법은 적절치 못함.
 - 改革·開放政策을 추진하는 지도자들을 지지·옹호해야 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는데 걸맞지 않는 진부한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은 퇴진해야 함.
 - 원로들이 존재하는 한 체제는 공고할 것이나 이들에게는 결점도 많은 바, 이들은 차세대를 지도하고 조언은 하되 장애가 되어서는 안됨.

3) 艾克思, “反形式主義下的路線鬭爭,” 「爭明」(1992年 3月號), pp. 56~57; 李文, “給改革開放注入緊迫感,” 「文匯報」(香港), 1992. 1. 28.

- 이와 같이 鄧小平이 보수원로에 대해 퇴진을 종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鄧小平은 黨政治局擴大會議(1982.7)에서 黨中央顧問委員會의 설치(1982.9)는 간부의 종신제를 폐지하기 위한 과도적인 조치이며 그 과도기는 약 10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던 바, 鄧小平은 현재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개방정책을 반대하는 주요 거점인 中央顧問委員會 廢止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원로 보수파의 정책간여는 개혁에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도체제의 혼선을 초래하여 당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黨의 권위를 추락시킬 가능성이 있는 바, 鄧小平은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음.
 - 또한 鄧小平은 자신의 사후에 대비하여 신진 개혁세력의 대폭적인 발탁과 함께 江澤民의 입지를 강화시킴으로써 후계체제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나. 保守派의 對應

- 陳雲과 鄧力群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파들은 개혁파의 개혁·개방 확대와 보수원로 퇴진 주장에 대해 「反和平演變」鬭爭을 역설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1) 「反和平演變」強調

- 中國의 보수파 지도자들은 蘇聯과 東歐 社會主義가 몰락한 주요 이유는 무분별한 시장경제제도 도입에 있었다고 역설하고 경제건설보다는 「反和平演變」이 黨의 중심 임무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은 개혁파들이 주장하는 개혁·개방 확대는 中國 사회주의를 서방의 의도대로 자본주의체제로 변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 바, 현 단계에서 中國은 「資產階級 自由化」에 반대하고 黨의 思想建設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2) 政策路線論爭 展開

- 鄧力群과 胡喬木을 위시한 보수파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鄧小平의 주도하에 추진되어 온 개혁·개방정책 결과 精神汚染 등 각종 병폐와 부조리가 생겨나게 되어 中國이 자본주의사회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음.
- 이들 보수파들은 개혁파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자본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주의의 성향을 띠고 있는지를 분류하여 자본주의적 요소를 제거하자 는 「姓社姓資運動」을 전개하고 있음.

- 黨 中央顧問委員會의 보수파들은 또한 廣東省 일대의 경제특구는 각종 범죄와 부조리의 온상이 되어 중국 사회주의의 기초를 약화시키고 있는 바, 자본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경제특구를 폐지할 것을 黨 中央에 요청하였음.
- 최근 보수파가 개혁파의 자본주의노선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1950년대 초기 자본주의요소 척결을 주장하였던 「3反·5反運動」⁴⁾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음.

(3) 幹部選拔時 思想性 重視 要求

- 개혁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수원로 퇴진 요구에 대해 보수파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思想性이 「14次 黨大會」와 「8期 全人大」에서 간부선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1991년부터 보수파 지도자들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德才兼備，以德爲主」(전문성보다도 사상성 중시)를 간부선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해 왔음.⁵⁾
- 한편 현재 黨 中央顧問委員會가 鄧小平路線을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으로 남아있는 바, 鄧小平은 14次 黨

4) 소위 「三反」은 反貧污, 反浪費, 反官僚主義였으며, 「五反」은 뇌물수취, 탈세, 국가자재 절취, 근무태만, 국가경제정보 누설을 반대한다는 것이었음.

5) 陳野平, “德才兼備，以德爲主：論選拔幹部的標準,” 「人民日報」, 1991. 9. 1.

大會에서 중앙고문위원회를 해산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고 보수파는 이를 강력히 저지하려 할 것으로 예측됨.

3. 改革派의 浮上과 改革政策 展望

- 중국정치에서 지도자 개인의 역할은 막대하므로 향후 中國이 어떠한 방향의 정책노선을 채택할 것인지를 전망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부의 인사개편 문제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음.

가. 人事改編 方向

(1) 改革·開放 擴大

- 중국공산당은 政治局 全體會議를 개최(1992. 3. 9~10)하여 개혁·개방을 더욱 대담하게 실시하고 「一個中心, 兩個基本點」이라는 당의 기본노선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로 결의하였음.
- 중국공산당의 이러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이미 예견되어 왔음.
 - 중국인민들은 과거 십여년 동안 추진되어 온 개혁·개방정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왔음.
 - 또한 과거 보수파로 분류되었던 李鵬, 宋平, 薄一波 등

지도자들까지도 개혁·개방의 확대추진에 동조하여
왔음.

- 中國은 「7期 5次 全人大」에서 발표된 「政府工作報告」에서 이미 鄧小平의 개혁·개방 확대추진 방침을 정식 천명하였으며, 「黨大會」(1992년 10월 말 예정)에서도 이를 중국공산당의 공식 지침으로 명문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 改革派의 浮上

- 鄧小平路線이 중국공산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中國은 앞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기 위하여 姚依林, 高狄, 王忍之, 賀敬之⁶⁾ 등 개혁의 확대를 반대해 온 보수파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거나 퇴진시키고 개혁의 확대추진을 지지해 온 지방의 실무 경제관료들을 黨과 政府機關에 대폭 기용할 것으로 예측 됨.
- 현재 개최되고 있는 「7期 全人大 5次 會議」(3.20~4.3)에서는 정국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인사이드가 단행되지 않고 있음.

6) 현재 中國 國務院 文化部長 代理인 賀敬之는 이미 사임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朝鮮日報」, 1992. 3. 8.

- 중국지도부는 현단계에서 대폭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할 경우 보수파의 강력한 반발을 유발하여 심각한 내부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그러나 中國은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금년말 개최될 黨大會와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 8期 全人大에서 보수파들을 점진적으로 정치일선에서 퇴진시킬 것으로 예상됨.
 - 향후 中國은 그동안 보수파들이 주장해 온 思想性보다는 專門性을 지도자 선발의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임.
 - 과거 中央顧問委員會가 개혁의 확대를 반대하는 거점 역할을 하여 왔던 바, 鄧小平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 위원회의 정치적 역할 축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王震은 건강상의 이유로 8期 全人大를 계기로 國家 副主席에서 물러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음.
 - 중국지도부는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보수노선을 견지해 왔던 李鵬 總理를 파면하고 朱鎔基나 鄒家華를 총리에 기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최근 李鵬이 개혁·개방 확대를 적극 지지해 왔던 점으로 보아 8期 全人大에서도 현직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經濟擔當 副總理 姚依林은 과거 경제개혁에 대한 그의 보수적 입장과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큼.
- 과거 中國에서 지도자 선발의 기준은 전략적인 정책노선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던 바, 현재 개혁노선이 승리하고 있으므로 朱鎔基와 鄒家華 등 개혁지향적인 경제담당 지도자들이 금년 가을 개최될 14次 黨大會에서 政治局委員으로 발탁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대외 경제개방정책을 확대추진하기 위해 中國은 錢其琛 外交部長을 정치국위원으로 발탁함으로써 實用主義外交를 적극 전개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軍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楊尙昆이 鄧小平을 동행하여 경제특구를 방문하는 등 개혁·개방 확대추진을 적극 지지하였던 바, 楊尙昆의 이복 동생인 楊白氷이 정치국위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편 개혁노선 확대방침에 따라 천안문사건의 책임을 지고 숙청되었던 趙紫陽 前總書記의 복권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바, 그가 8期 全人大에서 복권될 가능성도 있음.

나. 改革政策 展望

- 中國共產黨 政治局會議(1992. 3. 9~10)에서 이미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黨의 방침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 방

침은 앞으로 개최될 「14次 黨大會」와 「8期 全人大」에서도 그대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향후 中國은 사회주의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개혁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임.

- 중국지도부는 개혁정책을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中國은 기본적으로 과거와 같이 정치적 개혁은 유보한 채 경제적 개혁을 확대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1) 經濟改革 展望

- 中國은 1978년 11次 3中全會 이래 「中國式 社會主義」 건설을 위하여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구하여 왔는 바, 개혁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음.
 - 농업부문의 개혁에서 시작하여 도시, 기업부문으로 개혁의 범위를 확대하여 왔음.
 - 대내적으로는 가격체제, 금융제도, 유통체제 등 시장기능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中央執權的 計劃經濟가 지니고 있는 비효율성을 보완하여 왔음.
 -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통해 선진국의 기술, 설비 및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왔음.
- 中國의 지도자들은 경제파탄이 蘇聯의 붕괴를 유발한 직

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식하게 되어 내부경제 발전에 의한 중국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資本主義의 市場經濟體制를 확대 수용해 나갈 것임.

- 中國은 이미 1991년부터 십개년 경제건설계획(十年規劃, 1991~200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촌부문,⁷⁾ 국영기업부문⁸⁾ 등 분야의 개혁추진을 국가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왔음.
- 농촌경제부문에 있어서 中國은 식량증산 및 都農間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農家生產責任制의 확대 실시 및 정비, 鄉鎮企業의 건전한 육성, 농산품의 가격체제와 유통체제 개혁 심화, 농촌 산업구조 조정 등의 개혁조치를 추구할 것임.
 - 중국인구의 80%가 농민인 바, 농촌경제개혁은 중국 경제발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도농간 소득격차,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 농업생산책임제의 부작용⁹⁾ 등으로 中國은 농업부문의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음.

7) 中國은 1991년 11월 第11次 8中全會에서 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大綱을 확정하였음. “中共中央關於進一步加強農業和農村工作的決定,”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公報」, 1991年 第42號(1992. 1. 8), pp. 1464~1479.

8) 李鵬, “關於當前經濟形勢和進一步搞好國營大中型企業的問題,” 「人民日報」, 1991. 10. 11.

9) 農業生產責任制 실시 이후 중국농민들은 고수익 경제작물을 중점 경작하게 되어 일부 농산품의 부족현상이 초래되어 왔음.

- 또한 국영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¹⁰⁾ 중국정부는 앞으로 鐵飯碗(종신고용제), 鐵工資(고정임금제), 鐵交椅(능력에 따르지 않는 인사제도)의 타파와 노동계약제의 확대, 기업집단 육성, 기업소득세율 인하(55%→33%), 기업의 독자적 경영권 확대 등의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 한편 기업경영의 외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中國은 점진적인 가격자유화조치 단행, 상품의 유통체제 개혁, 기업에 대한 국가의 간섭 축소 및 소비구조의 조정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中國은 금융기관의 기업화, 금리체계의 다원화, 외환거래 자유화, 증권시장의 대외개방 등 금융체제 개혁을 단행할 것임.
- 「治理整頓」기간중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中國이 취해 왔던 엄격한 수입규제로 빚어진 對美貿易黑字는 中·美間 통상마찰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바, 향후 中國은 교역문제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수입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서 방과의 무역마찰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대외 경제협력

10) 약 30%에 이르는 中國의 國營企業들이 비효율적인 경영체제로 말미암아 적자운영을 하여 왔으며, 이는 中國政府의 재정난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음.

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2) 政治改革 展望

- 中國은 1990년대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편협한 사고의 탈피와 경직된 제도의 개혁을 필요로 하는바,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개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中國이 추구할 정치개혁의 목적은 사회주의제도가 함축하고 있는 경직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완벽하게 하는데 있으며, 서방과 같은 진정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님.
 - 中國의 지도자들은 중국 개혁정책의 목표가 사회주의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¹¹⁾
- 따라서 中國은 경제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黨·政分離, 관료주의 제거, 지방정부 권한 강화, 인사제도 개선(인민대표제도 개선, 직업공무원제도 확립 등), 법치제도 강화, 多黨合作制 실현 등 제한적인 부문에서의 정치적 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됨.
 - 中國의 정치개혁은 당의 지도·감독하에 추진될 것임.

11) 李鵬, “李鵬在世界經濟論壇的講話,” 「文匯報」(香港), 1992. 1. 31.

- 中國의 정치개혁은 경제건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한도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될 것임.
 - 정국의 안정과 지도층의 권위를 강화하는 것을 정치개혁의 주요 목표로 할 것으로 보임(예: 후계체제 공고화 등).
 - 中國 지도부는 서방에서 실시되고 있는 의회 직선제도, 다당제, 언론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 채택 요구에는 반대할 것임.¹²⁾
- 그러나 經濟改革과 政治改革간의 괴리가 천안문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바와 같이 경제적 여유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자유에 대한 열망을 고조시키게 될 것인 바, 中國의 경제개혁 확대는 중국인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4. 北韓에 미치는 影響

가. 中·北韓關係 變化 可能性

- 경제개혁정책을 확대추진하기 위해 中國은 앞으로도 선

12) 1991년 말부터 中國에서는 多黨制, 軍의 參政, 議會制度, 社會民主主義, 私有化 등에 대한 소위 「5反運動」이 전개되어 왔는 바, 앞으로도 中國에서 대폭적인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임.

- 진경제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외국자본, 기술 및 경제적 경험을 도입·흡수하여야 할 것임.
- 中國의 대외 경제개방정책 지속과 개혁의 심화는 중국의 교외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을 약화시키고 實用主義的 柔軟性을 더욱 부각시키도록 하는 작용을 할 것임.
 - 경제발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中國은 韓國과도 경제협력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中國은 과거 견지해 온 일방적인 對北韓 支持政策을 수정하고 있음.
 - 中國은 이미 北韓을 「혈맹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순한 「우호관계」로 간주하는 정책변화를 보여 왔으며 中國의 이러한 태도는 더욱 강화될 것임.¹³⁾
 - 경제적으로도 中國은 北韓과 硬貨決濟方式에 의한 무역거래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경제협정을 체결(1992. 1. 26)한 바 있고, 국제환경과 中國 내부정세의 변화에 따라 中國은 앞으로 北韓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 나갈 것임.
 - 반면 中國은 韓國과 경제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관계정상화를 추진해 왔으며, 개혁정책의 확대추진은 中國과 韓國의 실질관계를 증대시킬 뿐

13) 北韓에 대한 中國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에 대한 지지표명, 北韓 核開發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을 통해서도 나타난 바 있음.

만 아니라 양국간 수교일정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나. 北韓의 開放 誘導

- 蘇聯과 東歐 社會主義의 붕괴 이후 北韓은 체제유지를 위해 中國과의 관계강화를 절실히 요구하여 왔으나 中國의 정책변화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 北韓은 中國 등 과거 동맹국으로부터의 지원 감소와 국내경제 침체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국면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北韓은 서방과의 경제적 협력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음.
- 北韓은 198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체제에 위협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제한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北韓은 앞으로도 경제발전을 통해서 현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중국식 대외개방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임.
- 1978년부터 中國은 정치적 개혁을 유보한 채 경제적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하여 민생의 안정을 기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 中國의 개혁·개방 확대와 이의 성공적인 추진은 北韓의

개방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임.

- 중국지도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北韓의 開放과 經濟改革을 촉구하여 왔으며, 中國에서 새로이 등장할 보다 실용주의적인 지도자들도 北韓이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개방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
- 中國이 개혁정책을 확대추진할 경우 中國은 北韓에 대한 일방적이며 시혜적인 원조를 축소해 나가게 될 것인 바, 이는 北韓의 개방을 유도하는 압력요인이 될 것임.
- 아울러 中國은 서방과의 경제적 협력을 위해 이들과의 관계증진을 필요로 할 것임. 이 점도 역시 北韓으로 하여금 현실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그러나 中國의 개혁·개방정책 결과 中國에서 내부적인 혼란이 야기될 경우 北韓은 대외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음.

5. 우리의 考慮事項

- 中國이 개혁·개방정책의 확대를 통하여 200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중진국으로의 도약이 달성될

경우, 中國은 우리의 경제적 경쟁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우리는 中國의 개혁정책이 域內 秩序의 안정과 北韓의 개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 中國의 經濟建設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경제의 꾸준한 발전과 산업구조 조정을 통하여 경제적 내실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임.

- 금년 10월 말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14次 黨大會」에서 北韓과의 동맹관계 유지를 강조해 왔던 보수파 지도자들이 물러나고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개혁파의 입지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가까운 장래에 韓·中修交가 성사될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는 中國의 개혁파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강화를 통해 中國과의 관계증진에 힘쓰는 한편 韓·中修交 교섭과정에서 北韓, 臺灣 및 日本 등의 우려를 야기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임.
- 우리가 中國과의 관계강화를 서두르는 목적은 中國을 통해 北韓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우리는 中國이 개혁정책을 확대하는 것을 기회로 활용하여 韓·中協力을 강화함으로써 北韓의 개방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